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19호

2025.05.23 금 18: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스포츠시민단체공동주최 정책토론회

새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 제안

체육시민연대 규탄 성명

운동하는 아동의 학습권을 짓밟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각성하라 !

[현장] 민변시민단체 '새 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 제안 토론회'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 호소

"중간고사 볼 거면 국대 포기하라고.. 운동선수는 공부하면 안되나"

이주영 오마이뉴스 기자

생활체육 인구 급증하는데.. 대선 후보 공약선 찬밥 신세

[가리사니] 체육 공약 실종

김민영 국민일보 기자

[2025 새 정부에 바란다]

'스포츠건강창'이 필요한 이유

이진욱 일간스포츠 기자

제주시체육회

"체육계 지지 선언 확산"... 0대명 김문수, 대선 앞두고 스포츠인 표심 결집... 정책 변수로

송지민 톱스타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더불어
민주당

스포츠 시민단체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

새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 제안

2025. 05.23. 금 18: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발제 1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

발제 2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3 서정화 (민변 스포츠팀)

| 종합토론 |

허정훈 (중앙대, 체육시민연대 자문위원)

장재욱 (중앙대)

이병호 (대한학교체육회 상임위원)

정진아 (민변 스포츠팀)

이대택 (국민대학교,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주최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문석 의원실





운동하는 아동의 학습권을 짓밟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각성하라!

분명히 바로잡는다. 모든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다. 학생은 아동이고, 아동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학습의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된다. 만약 일부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아동학대이자 학습권 침해다.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중책의 유승민은 지난 24일 전국소년체전이 열리고 있는 경남 김해에서 2025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운동하는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최저학력제,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 합숙소 운영금지, 이 모두를 엘리트 선수 육성의 악으로 규정하면서, 운동하는 아동의 학습권을 적대시하였음은 물론 일반 학생의 운동참여까지도 위태롭게 하였다.

최저학력제의 무력화

국회가 운동에만 매몰된 학교운동부 문화 개선과 아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학교운동부 ‘현장’의 구태, 그리고 아동 스스로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고자 2006년부터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숙의하여 시행한 학교체육진흥법 상의 최저학력제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와 지도자, 그리고 국회의원의 합작으로 시행 직전에 무력화된 바 있다. 이들의 요구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보충학습 방편인 e-스쿨의 대리수강을 통해 학업을 대놓고 등한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력화에 동참함으로써 어떻게든 학업을 병행하고자 노력하는 선량한 학생선수까지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는 반헌법적인 교육권 침해

헌법상 권리인 교육권의 핵심은 국민이면 누구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 의무교육을 통해 모든 아동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총 9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동안 모든 아동이 가장 기초적인 의무교육을 기반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도록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아주 예외적인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라는 반헌법적 제도는 이미 의무교육 기간에도 적용되어 헌법상 교육권과 의무교육을 침해하는 조치로 남아있다. 이에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 기간인 초, 중학생은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를 조기에 폐지하라 권고하여 이 제도가 학생의 교육권 침해임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은 이 출석 인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만 함에도 일부 몰지각한 지도자와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 결석이 마치 권리인 것으로 인식된 나머지, 출석의 인정을 두고, 학교관리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되고 있으며, 학생은 수시로 일어나는 결석에 학습 진도를 놓쳐 정상적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유승민은 운동부는 결석을 더 하도록 내버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반헌법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음은 물론 그것이 초래하게 될 모든 아동의 운동부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였다.

반인권적 합숙소의 부활? !

이번 간담회에서 유승민의 합숙소 부활 선언은 과연 ‘특출난’ 운동선수 출신다운 발상이다. 24시간 관리 속에서 숨이 막히는 학생선수와 관리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지도자, 3-4개월에 한 번 집에 가는 아동, 다양한 사회화의 기회를 놓쳐버린 채 외부와 단절된 섬(합숙소)에 사는 아동, 상명하복과 감시의 합숙소 문화로 인한 인권침해에 명드는 아동, 이 모든 것이 합숙소의 현실이다. 합숙소는 실력이 없어 운동시간으로만 승부를 거는 구시대의 지도자, 불법적인 합숙소 운영으로 이윤을 남기려는 지도자, 선수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나머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비민주적인 지도자들이나 원하는 과거 한국 체육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유승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어렵다. 다 주소지를 옮길 수 없고, 편법 사용하면 다 걸린다. 아이들을 편법 속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미 편법적인 합숙소들이 판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편법을 잘 알고 있는 유승민의 해결책이 고작 합숙소를 부활시켜 ‘불법의 합법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것에 경악한다. 유승민은 이미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리베이트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았을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을 뜯어고치겠다는 일성을 통해 ‘불법의 합법화’를 암시한 바 있다. 이쯤이면 그의 인식은 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수준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운동부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있다!

팀에 선수가 없어 전국대회만 가능한 말라비틀어진 학교 스포츠 저변, 청소년 신체활동 OECD 최하위, 학습권 보장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학생선수,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도저히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도록 만드는 지나친 운동시간에 있다. 지나치게 긴 단체훈련시간은 학생선수를 교실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게 하고, 학업이 스트레스가 되게 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발성에 기반한 개인 훈련의 기회마저 상실케 하는 문제 중의 문제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 또한 과도한 훈련시간이 원인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학습권 때문인 것으로 인과관계를 오인하는 모습도 보여 걱정을 키운다. 살펴보면, “학습여건이 안 돼 방통고 등으로 편입하는” 것, “학교운동부의 침체”, “학생 선수의 사교육 문제”, “학군지에서의 운동부 기피 현상” 등 모든 문제는 쓸데없이 과도한 훈련시간 때문에 학업이 방해되고, 진입단계에서부터 운동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며, 학생선수가 학교 밖으로 내몰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 결코 학습권 보호 정책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운동부 출신의 눈물

무엇보다 심각한 지점은 조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동부 생활은 학생선수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큰 후회를 남긴다는 점이다. 영광의 메달을 차지한 누군가의 성공에 희생된 수많은 학생선수들은 훗날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후회와 회한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 현재, 학부모 간담회라는 자리에 나가 운동만 하게 해달라는 학부모 중 상당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나이가 되면 현재 자신의 선택과 생각이 얼마나 많은 학생과 운동선수를 궁지로 내몰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운동부 출신은 경제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가 운동이라는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육체노동의 현장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빚고서 언급한 유승민의 궤변은 성공한 운동선수 출신인 유승민의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거엔 선수하다가 지도자로 끝났지만 지금은 스포츠외교,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은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학습권을 박탈된 가운데 이뤄낼 수 없는 성과다. 또 그 성공은 끝까지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결과여야 정당한 것이지, 스포츠로 성과를 남긴 극소수의 사례를 들거나 어쩌다 잘되는 것은 교육의 의도성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대다수의 운동부 출신 학생선수들까지 한국 스포츠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이 그랬듯 열심히 살면 영광이 올 것’이라는 공감 부족과 비현실적 인식은 또 한번 그가 대한체육회장으로 왜 부적합한 인물인지를 증명한다.

유승민은 대답하라!

과거 방식의 엘리트 스포츠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 저출생으로 심각한 스포츠 저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운동에만 투신하도록 해달라는 일부 학부모의 민원과 달리, 미래를 위해 결코 운동에만 투신할 수 없다는 절대 다수 학생들의 학업 병행 요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날과 같은 비합리적 구조 속에서는 결코 운동부를 선택할 수 없어 운동을 포기하는 아동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나라를 OECD 신체활동율 꼴찌국가로 전락시킨 학교체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수 엘리트 선수 집단의 대변자가 아닌 대한체육회장으로서 답하라!

유승민 당신이 지금 당장 불편한 운동부 민원에 집중하는 동안 절대 다수의 학생은 학업-운동 갈라치기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오늘도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일상의 스포츠활동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주변을 돌아보라! 과연 당신 주변에는 다양한 의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반성하라! 혹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라! 이미 당신에게는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라는 최악의 불공정과 협회 후원금을 불법으로 나눠 먹은 혐의도 도사리고 있다.

2025년 5월 25일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중간고사 볼 거면 국대 포기하라고... 운동선수는 공부하면 안 되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중간고사를 응시하기 위해 국가대표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했다."

23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 제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정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스포츠팀 변호사가 전한 일화다. 학창 시절부터 스키 선수 생활과 학업을 병행해온 그는 당시 '운동과 공부는 함께할 수 없는 걸까',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미국 대학에 진학한 서 변호사는 공부와 함께 운동을 지속하며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모굴(프리스타일 스키의 세부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졸업 후엔 한국 로스쿨에 진학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미국) 캠퍼스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운동선수'라는 틀에 가두지 않았다"라면서, 엘리트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 외에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쌓아줘야 은퇴 후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데, '운동선수는 운동만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한다는 우려다.

실제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9월 대한체육회에서 받은 '선수 경력자 진로 실태조사'(2012~2023년) 자료에 따르면, 은퇴한 운동선수의 약 38%가 무직이고 취업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특기자 제도가 학생을 획일화된 진로 경로로 몰아넣어"

서 변호사는 현행 입시제도인 '체육특기자 제도'를 없애야 엘리트 체육인에게 오로지 '운동'이라는 외길만 걷도록 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육특기자 제도는 엘리트 체육인의 대학 진학 통로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 실적을 보유한 학생에게 입시에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우수한 운동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지만, 학생을 획일화된 진로 경로로 몰아넣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학생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운동 외 다른 경험 없이 훈련에만 집중하면서 일반적인 학생 생활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운동 외 분야에서 자율성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기 어려워진다"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경기 성적만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현실에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인성, 사회성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간과된다"며 "교우 관계나 수업 참여 등에서 스스로 위축시키거나 소외감을 겪는다. 이는 단순히 진로 선택 문제를 넘어서, 자아정체성의 왜곡과 장기적인 사회 적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체육특기자 전형 대신 '스포츠참여학생 전형'이라는 새로운 입시 모델을 제시했다. 경기 실적 중심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온 학생의 성장 과정'을 입시에서 평가하자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학교 스포츠클럽, 지역 생활체육, 방과 후 체육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꾸준함·협동심·책임감·시간관리 능력 등이 종합적 평가 요소가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도 역시 전형의 필수 요건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동하는 학생'이자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존중한다. 스포츠를 진학 수단이 아닌 '삶의 일부'로 인식하게 하고, 학교 체육의 문을 소수 엘리트가 아닌 전 학생에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음 장 계속

발제자인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국제협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권을 (한국의) 엘리트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박탈당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 또는 학업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학습권이 유지 안 되는 일방적 스케줄 때문에 미래를 위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2024년 최저학력제가 시행됐지만, 이후 면제조항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법이 무력화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운동과 학업을 대결 구도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균형 있게 성장할 기회를 막아선 안 된다"며 "초·중학교에선 학습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필요"... '스포츠의 날' 제안

더 나아가 발제자들은 소수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스포츠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국 체육 정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학생이나 시민 누구나 체육 활동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회를 보장·확대해야 운동이 엘리트 선수 등 특정 소수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관습을 타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발제를 맡은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생활체육 참여 증진이 목적인 다양한 정책 활동에도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약 40%가 고정적으로 존재한다"며 "국민의 스포츠권 향유와 스포츠의 다양성·자율성·민주성 원리 실현을 목적으로 '스포츠기본법'이 2021년 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법의 가치와 목적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행정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함 사무총장은 "모두의 스포츠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40%의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며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운동을 안 해봐서', '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서' 등 일상에서 스포츠를 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와 정책이 기획·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캐치프레이즈 구현을 위한 '스포츠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매월 몇 째 주 수요일 혹은 금요일과 같은 형식으로 날짜를 지정하고 스포츠데이에는 오전 근무 또는 오전 수업만 하도록 유도하는 구상이다. 스포츠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스포츠데이에는 스포츠 시설과 스포츠 관람료를 할인하고,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기업 및 기관에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놔다.

함 사무총장은 "이미 영국·캐나다 몇몇 국가에서는 특정 날짜나 기간, 시즌, 요일 등을 지정해 어린이·청소년·성인의 여가 스포츠 장려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전재수·조계원 의원실에서 주최했으며, 문화연대·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팀·스포츠인권연구소·체육시민연대가 함께했다. 토론자로는 허정훈·장재옥 중앙대 교수, 이병호 대한학교체육회 상임위원, 정진아 민변 스포츠팀 변호사, 이대택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정용철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민변 스포츠팀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스포츠 관련 법을 공부하고 있다"며 "5월 대선을 앞두고 스포츠 정책과 관련해 국회에 가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보자는 의견이 모여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가리사니] 체육 공약 실종

지금 대한민국은 운동 중이다. 러닝크루 열풍이 전국 공원을 휩쓸고, 주말마다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예약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파크골프장은 항상 붐비고, 공공체육관은 만석이다. 아침저녁으로 운동화 끈을 조이고 라켓을 쥐는 사람들로 도시가 들썩인다. 운동은 이제 유행을 넘어 일상이 됐다.

하지만 선거판은 묘하게 조용하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연일 경제, 부동산, 외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가상자산, 반려동물 관련 공약도 나왔다. 그러나 정작 국민 대다수가 매일 뛰고 땀 흘리는 '체육'에 관한 공약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체육 공약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에서 홀대받는 분야다.

각 당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체육 관련 공약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최종 공약집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체육은 여전히 '뒷순위'로 밀려 있다. 그나마 언급된 내용도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이재명·김문수), 부산 돔 야구장 건설(이준석)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그친다. 하지만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선정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고, 돔구장 건설은 수십 년째 반복되는 구호에 가깝다.

국제대회 유치나 대규모 종합경기장 건설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국민이 진짜 바라는 건 훨씬 작고 현실적인 변화다. 공공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파크골프장에 벤치와 화장실이 마련되며, 야구장에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이런 작지만, 구체적인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체육은 '금빛 메달'보다 회색 콘크리트 위 러닝 트랙이 더 절실한 영역이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요구에 정치권은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왜일까. 이유는 명확하다. 운동하는 유권자는 '표'로 뭉치지 않기 때문이다. 러닝크루, 테니스 동호회, 배드민턴 모임은 주말마다 활발히 활동하지만, 정치적 결집력은 약하다. 단체는 있어도 정치적 목소리는 없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체육을 '표가 안 되는 영역'으로 본다.

그러나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프로야구 KBO리그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올해도 역대 최단기간에 400만 관중을 유치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축구·농구·배구도 열성 팬을 넘어 일반 관중을 끌어들이고 있다. 팬층은 넓어지고 문화는 진화하지만, 관람 환경은 제자리걸음이다. 비싼 입장료, 주차난, 교통 불편은 여전히 팬의 몫이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다. 집 앞 공원에만 나가도 러너들이 즐비하고, 수영장은 아침부터 밤까지 인산인해다. 파크골프장은 어르신들의 새로운 광장이 됐고, 100만원을 호가하는 운동 장비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 체육은 이미 여가가 아니라 '삶'이 됐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은 여전히 부족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공간은 낡고 협소하다. 장비는 노후했고 예약은 불편하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라면서 정작 운동할 공간은 개인이 알아서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러닝크루는 공원과 강가, 학교 운동장을 전전하지만 '민폐족'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이들은 어디서 뛰어야 하는가.

정치가 무심한 탓이지만,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체육 공약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애초에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란 결국 표를 따라가는 게임이다. 표가 안 되면 공약도 없다. 이제 유권자가 먼저 움직일 차례다. '체육 공약은 어디 있습니까'라는 질문 하나가 정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크루와 동호회, 생활체육인들이 일상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체육도堂堂히 주요 공약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번 대선판엔 체육이 없지만, 운동장은 오늘도 북적인다. 정치가 눈을 돌리지 않으면 이제 표심이 돌아설 차례다

[2025 새 정부에 바란다]

'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

일간스포츠
이진욱 기자

2025.05.23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023년 기준 62.4%다(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조사). 그중 60대가 전년 대비 8.4%가 상승한 68.0%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10대 참여율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47.8%로 나타났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고 50대~70대 이상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국은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클럽법」 등의 시행으로 참여 중심의 스포츠 환경이 조성 중이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공(튼튼머니, 1인당 최대 5만원)으로 생활체육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서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권 구현을 위해 정부와 체육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올림픽 등 국제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참여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게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 2016년 체육단체 통합(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이후, 생활체육 중심의 스포츠 환경이 조성됐다. 국민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스포츠'가 확산했다. 각 세대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평생 스포츠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 중이다.

환경이 변하고 국민 인식도 변했지만, 담당 정부 부처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다. 업무 영역의 제한, 정책 연계 미흡 등 부처 간의 벽은 여전하다. 결국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스포츠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큰 변화 없이 기존 정책이나 사업이 담당 부서별로 정형화된 채 추진되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전 세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은 국민이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설계된다. 영유아 시절 신체 활동을 배우고, 유·청소년 시절엔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접한다. 성인이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고, 노인이 되면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 정책 방향도 이와 같다.

하지만 영유아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학교 스포츠는 교육부, 성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은 다시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가 다르다. 그만큼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앞으로의 스포츠 환경은 스포츠 복지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적 권리의 실현에서 출발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미래세대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국민 건강 유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로도 이어진다. 이처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건강청' 설립은 단순한 체육 관련 정부 조직의 확대가 아닌, 스포츠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건강청' 설립을 통해 생활체육-엘리트 체육-스포츠산업-교육-건강·의료 간 통합적인 비전과 정책의 시행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스포츠 분야는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부처 간 벽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점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성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 관련 정책을 진정한 스포츠 복지 국가를 위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건강청' 설립을 통하여 건강·복지, 교육, 기술개발, 고용·노동, 관광, 지역발전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고, 건강증진과 연계하여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포츠활동을 통해 의료비가 절감되면 그 혜택을 다시 돌려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복지국가는 일종의 증세 없는 복지기도 하다. 이를 실현할 방안이 필요한 때다.

또한 엘리트 스포츠 진흥을 위해 국가전략 사업을 책임지는 전문적인 중앙 행정기관, '스포츠건강청'도 필요하다. 한국 체육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자원을 확보하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기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타 분야에서 대표적인 유사 행정기관이 최근 설립된 '우주항공청'이다.

물론 '청'보다는 '부'를 신설해 외연을 확장하고, 위상을 강화할 수도 있다. 실제로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체육부'를 설치한 바 있다. 이어 올림픽을 성공 개최한 후 '체육청소년부'로 개편한 사례도 있었다.

주성택(가천대학교 초빙교수/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포럼)

자료 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50523n15329>

“체육계 지지 선언 확산”...이재명·김문수, 대선 앞두고 스포츠인 표심 결집→정책 변수로

선거를 앞둔 2월, 체육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커졌다. 조용하던 현장은 점차 열기로 채워졌고, 체육인들의 지지 선언은 대선 판도에 예기치 못한 변수로 떠올랐다. 한 표의 무게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기는 이들은, 자신들의 염원을 담아 각각의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체육계의 조직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먹사니즘 스포츠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공식 발대식을 갖고 이재명 후보 지원을 선언했다. 조현재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노민상 전 수영국가대표팀 감독 등 다수의 체육계 인사들이 동참했다.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 장재근 전 진천선수촌장, 한민수 전 파라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 등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체육 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장재근 전 선수촌장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공감하는 전문 체육인들이 29일 국회에서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라며, 지방 체육회 자립, 자율성 확보, 최저학력제 폐지 등 현실적인 체육 정책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체육계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위풍당당’ 대선 지원단은 26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했고, 홍수환 전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이 “김문수 후보의 ‘정정당당’ 캐치프레이즈는 스포츠맨십과 맞닿아 있다”며 동료 스포츠인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지원단에는 김소식 전 대한야구협회 부회장, 백인천 전 프로야구 지도자 등 야구계 원로부터 황경수 전 대한씨름협회장, 19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엽, 박시현 전 복싱 국가대표, 고기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체육 선진화와 개혁 완수”라는 목표 아래 김문수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했다.

이와 같은 체육계의 집단적 지지는 각 당 후보의 체육 정책 설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는 자립 기반 구축,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 발전, 선수 복지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도 반영되고 있다.

팬들과 체육계 관계자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21대 대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 캠프는 체육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약 실현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육계 지지가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유일한 체육연구기관의 자부심...한국스포츠과학원 45주년 기념식 개최

<https://www.news1.kr/sports/general-sport/5794404>

제주포럼에서 '올림픽 운동·스포츠 역할' 세션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6066600056?input=1195m>

구미시, 국제 스포츠도시 '도약'... "아시아 스포츠 중심지로 부상"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52616065069956>

장애·비장애를 넘어... 나주시 '어울림 e스포츠 교실' 개최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523>

"로봇이 탁구하며 백스핀 샷도 날리네" 스포츠 로봇 '성큼'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3004486642172856>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카데미 코리아’ 총청서 첫 개최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155418&code=61121111&cp=nv>

‘걸으면서 기부해요’ 기부+스포츠 행사 인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62877&ref=A>

홍명보 감독, "국가대표 사명감과 팀 스포츠 정신 더 있어야"

<https://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923>

오산시장애인체육회, '2025 장애인 스포츠 체험' 행사 성료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4133>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